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51호
2018. 3. 19

정책동향

-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및 시사점
- 공공 턴키사업, 왜 외면받고 있나

시장동향

- 전세/매매가격 비율,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

산업정보

- 한반도평화협정과 건설시장의 새로운 기회
- 공제 조직의 자본 안정성 제고 방안

건설논단

- 4차 산업혁명과 건설 생산성 혁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 및 시사점¹⁾

- 건설업 노동소득 분배율 0.89, 타 산업에 비해 높고 증가세 뚜렷 -

■ 산업별 비교 분석 결과, 건설업 노동소득 분배율이 0.89로 가장 높음.

-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건설업의 노동소득 분배율(labor income share)²⁾은 제조업 대비 약 1.7배 수준으로 나타남.
 - 노동소득 분배율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몫으로 해석됨. 결국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이 약 89%로 가장 높은 산업임을 의미함.
 - 다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임금)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되는 경향이 존재함. 따라서 산업별 노동집약도에 따른 효과를 통제(control)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수준뿐만 아니라 추세 분석이 요구됨.

<표 1>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2015년 기준)

산업 분류	노동소득 분배율	제조업=100	건설업=100
1.농업, 임업 및 어업(A)	0.77	142.2	85.9
2.광업(B)	0.38	69.8	42.1
3.제조업(C)	0.54	100.0	60.4
4.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및 환경업(DE)	0.24	44.2	26.7
5.건설업(F)	0.89	165.6	100.0
6.도매 및 소매업(G)	0.54	100.5	60.7
7.운수 및 창고업(H)	0.75	139.4	84.2
8.숙박 및 음식점업(I)	0.69	127.5	77.0
9.정보통신업(J)	0.43	80.1	48.4
10.금융 및 보험업(K)	0.43	80.1	48.4
11.부동산업(L)	0.43	80.1	48.4
12.전문, 과학, 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업(MN)	0.43	80.1	48.4
13.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OPQ)	0.76	141.5	85.4
14.문화 및 기타서비스업(RSTU)	0.63	116.1	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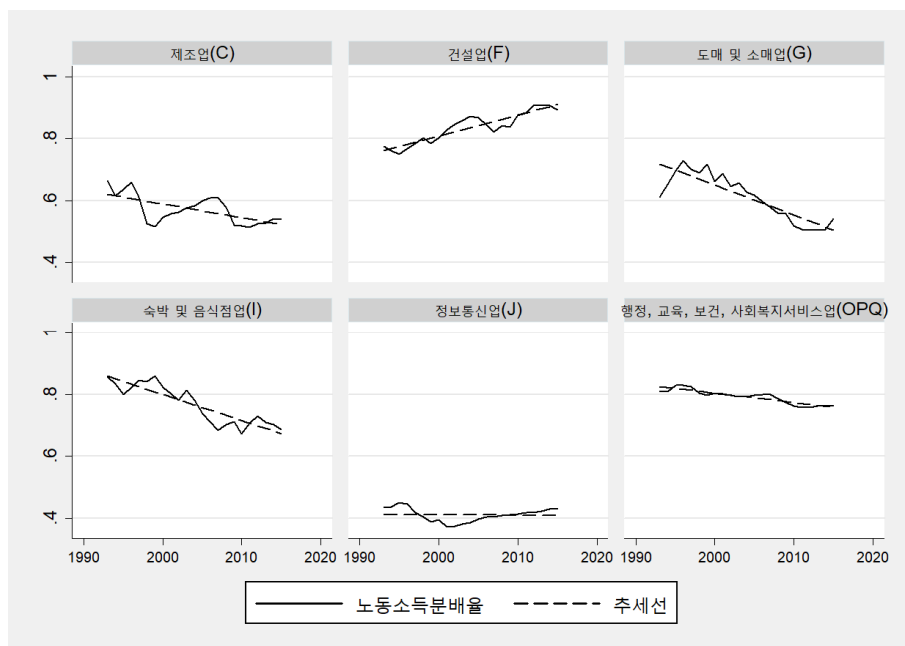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산업별 자료 중 가장 최근 연도(2015년)를 이용함.

1) 본고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생산성 계정구축 및 산업별 생산성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2) 산업의 부가가치(GDP)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다른 요소 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됨.

■ 타 산업 대비 건설업의 노동소득 분배율 증가 추세 뚜렷

- ‘제조업(C)’,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업(I)’,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OPQ)’ 등의 산업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정보통신업(J)’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 반면, 건설업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관찰됨.
 - 추세선이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됨.
 - 결과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에 동일한 금액을(1단위를) 투자할 때, 근로자에게로 귀속되는 몫이 상대적으로 커서 가계소득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실효적임을 시사함.

<그림 1>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1993~2015년)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대분류 산업별 전 기간(1993~2015년) 자료를 이용함. 증가 추세를 나타낸 산업들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및 환경업(DE), 건설업(F), 운수 및 창고업(H)으로 분석됨.

-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인 ‘소득주도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노동소득 분배율과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한정된 자원이 재배분(reallocation)되도록 시장에 신호(signaling) 및 유인(incentive)을 주는 것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효율적 수단임을 정부 예산 또는 추경 편성시 주지할 필요가 있음.

나경연(부연구위원 · econa@cerik.re.kr)

공공 턴키사업, 왜 외면받고 있나

- 과도한 입찰비용, 발주자의 책임 전가,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 쟁점으로 대두 -

■ 공공부문 턴키사업의 유찰 증가

- 우리나라에서는 턴키사업³⁾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 턴키사업의 발주가 감소돼 왔음. 더욱이 최근에는 사업 감소 와중에 유찰마저 크게 증가하여 턴키사업이 발주기관과 계약자 모두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나타남.
 - 2011년 2.8%였던 유찰 비율은 턴키 발주 물량이 최저를 기록했던 2014년에는 41.4%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60%까지 치솟았음.
 - 발주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이처럼 유찰이 증가한 것은 수주 실패시 보장받을 수 없는 과도한 입찰비용,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전적인 관리 책임, 그리고 수익성 보장 곤란 등으로 턴키사업이 기업에 손실을 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표 1> 턴키방식의 유찰 발생 추이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사업 수	106건	69건	72건	29건	49건	50건	42건
유찰 수 (비율)	3건 (2.8%)	5건 (7.2%)	8건 (11.1%)	12건 (41.4%)	17건 (34.7%)	30건 (60.0%)	16건 (38.1%)

자료 : 국토교통부(2017), 기술형입찰(턴키 등) 유찰 발생 현황.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6년부터는 다시 턴키방식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턴키 등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에서 설계 보상비의 현실화,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마련, 기술평가 비중 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되었음.

■ 해소된 턴키사업의 쟁점

- 공공 턴키사업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전체 공공 발주 금액의 30% 수준까지 급증하였음. 하지만 발주 금액의 급증과 함께 예산 낭비, 평가 비리 및 로비, 입찰 담합, 대형 기업의 수주 독점 등 여러 부작용이 이 시기에 나타났음.
- 이에 그동안 실효성 있는 여러 대책들이 시행되고, 턴키사업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현재에는 대

3) 여기서 ‘턴키사업’은 국내 기술형 입찰제도에 따른 사업을 의미함.

부분의 쟁점들이 해결되었음.

- 예산 낭비라는 시각은 턴키사업과 설계시공분리 방식의 낙찰률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며 나타났는데, 사실 턴키사업은 설계시공분리 방식의 사업과 유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 4) 턴키 방식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오해는 많은 부분 해소되었음.
- 정부의 입찰담합 수사와 강력한 처벌에 따라 기업들 스스로 입찰담합 관행이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을 통한 무리한 사업 수주를 피하는 상황임.
- 현재 대형 건설사는 기술력이 필요한 대규모 복합공종 사업 위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의 독점적 지위 문제는 해소된 상태임. 턴키사업에서 6개 대형 업체가 차지하는 수주 건수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6년 25%로 감소했음.

■ 새로 나타난 턴키사업의 문제점

- 기존 쟁점들은 해결되었으나 높은 입찰비용, 발주자의 과도한 책임 전가,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이 턴키사업의 문제로 새로이 등장했음.
 - 과도한 입찰비용은 낙찰 탈락시 기업의 손실 비용 부담을 크게 하여 담합을 유인하거나,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찰 참여자 수를 감소시킴.
 - 발주기관은 턴키사업에서 발주처 책임의 설계변경과 민원, 보상 등의 책임까지 계약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턴키 방식에서 더 많이 목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의 낙찰률 하락과 발주기관의 과도한 책임 전가에 따라 턴키사업의 수익성 보장이 힘들어졌고, 이 때문에 턴키사업에서도 적정공사비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입찰 과정의 평가 비리 및 로비 문제가 있는데, 향후 턴키사업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설계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 설계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입찰 평가 방법, 평가위원 관리 체계 등과 관련하여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주목할 만한 효과는 얻지 못했음.
- 해외에서 턴키사업은 설계와 시공의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턴키사업 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성유경(부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4)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복합공종공사 사업을 턴키사업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즉,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 신공법 및 신기술을 통해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임. 특히 다른 방식의 사업보다 계약자가 짊어지는 리스크 규모와 책임이 커서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음. 또한, 턴키사업의 사업비는 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가 제시함. 즉, 설계시공분리 방식이 정해진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턴키 방식은 발주처가 제시한 예산 한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 성능과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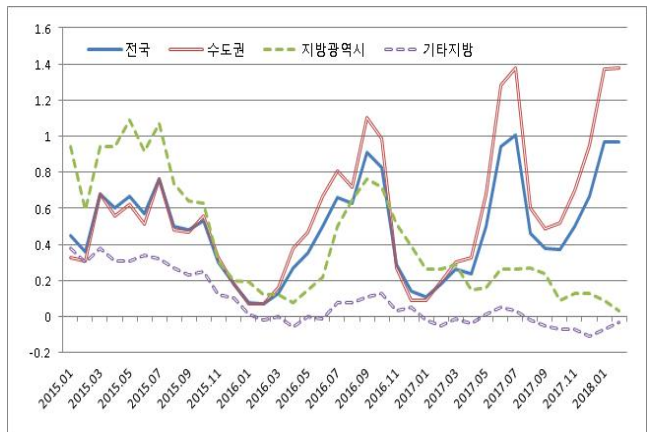
전세/매매가격 비율,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

- 투기적 수요 차단에는 긍정적이나 지방 주택시장 위축 우려 -

■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 확대, 전세가격은 상승세 둔화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6년부터 상승세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참조).

<그림 1>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015.1~2018.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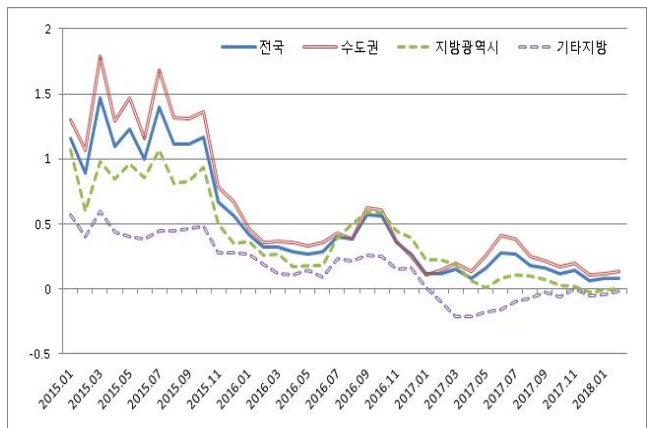


자료 : 부동산114(주).

-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월 0.08%이던 상승률이 2018년 2월 현재에는 0.97%를 기록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특히, 수도권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동일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을 주도함.
- 반면, 지방 광역시 및 기타 지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기타 지방은 하락세로 전환됨(<그림 2> 참조).

<그림 2> 월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2015.1~2018.2)
(단위 : %)



자료 : 부동산114(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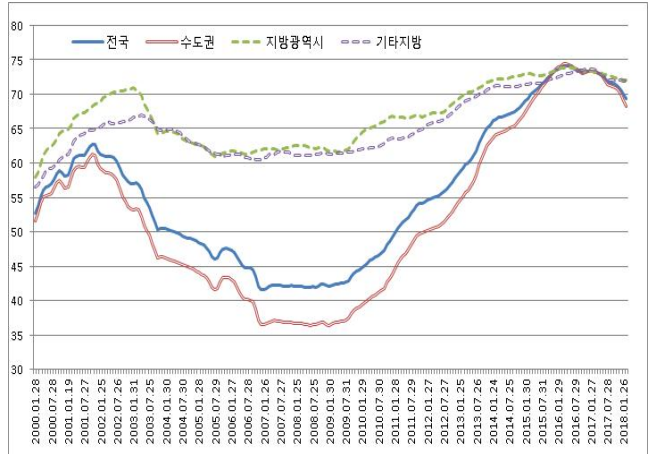
-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1.47%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어 올 2월 현재에는 0.08% 상승한 데 그침.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의 둔화는 수도권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 광역시는 2017년 12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지방은 2017년 2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전세/매매가격 비율, 최근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 보여

- 전국의 아파트 전세/매매가격 비율은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임(<그림 3> 참조).
 - 전국의 아파트 전세/매매가격 비율은 지난 2008년 5월 41.9% 수준이었으나, 2016년 4월에 74.1%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8년 2월 현재에는 69.4%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수도권은 전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8년 2월 현재 68.3% 수준임.
 - 지방 광역시 및 기타 지방은 2002년 이후 하락하다 최근 73.9%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72.0%, 기타 지방은 71.8% 수준을 보임.

<그림 3> 월별 아파트 전세/매매가격 비율 추이 (2000.1~2018.2)

(단위 : %)



자료 : 국토교통부.

소폭 하락하여 2018년 2월 현재 지방 광역시는

■ 투기적 수요 차단에는 긍정적이나 지방 주택시장은 위축 우려

- 최근 전세/매매가격 비율의 하락세는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나, 전세가격의 상승세 또한 둔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이미 하락세로 전환되어 당분간 전세/매매가격 비율의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매매가격의 상승세는 2016년 1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2015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전세/매매가격 비율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전세/매매가격 비율의 감소세는 갭(gap)투자 등 투기적인 수요의 차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현재의 전세/매매가격 비율은 70% 수준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집값의 30%만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임.
 -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보다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투기적인 수요가 접근하기 쉬운 상황으로, 전세/매매가격 비율의 하락세는 투기적 수요의 차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다만, 지방은 매매가격의 상승세 또한 둔화되고 있어 지방 주택시장의 위축이 우려됨.

엄근용(부연구위원·kyeom@cerik.re.kr)

한반도평화협정과 건설시장의 새로운 기회

-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 현실화 진전, 건설시장 확대의 계기로 만들어야 -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높일 듯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됨.
 - 2018년 4월 관문점에서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은 정전협정을 한반도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994년 제네바합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협정을 통한 북한 체제의 안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미국의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등이 초래한 한반도 긴장 고조 상태가 한반도평화협정으로 해소되면 북한을 연결고리로 하는 우리나라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 중국의 신동북진흥전략, 그리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국, 중국,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경제 구상

- 한반도 신경제지도
 - 3대 경제 및 평화 벨트 구상을 담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경협을 넘어 동북아 경협의 비전까지 포함하는 현 정부의 ‘통일 비전’ 이자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경제 비전’ 이라 할 수 있음.
 -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는 금강산 관광 재개, 원산(관광), 단천(자원 개발), 청진(신재생에너지), 나진(복합 물류),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사업 등이 포함된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을 지향함.
 - 환황해 경제협력벨트는 수도권, 개성,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물류·교통벨트 구축을 지향하는데, 경의선 개보수,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건설과 개성공단 재가동,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건설 등이 포함됨.
 -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을 생태와 환경,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하는 관광벨트로 구성하고, 남북 공동시장 개설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통일경제시범특구도 설치하는 구상임.

● 한국, 중국,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

- 한반도평화협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우리나라를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는 교통과 물류,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 연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Kor-Eurasian 벨트 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종식시켜 유라시아대륙을 우리나라의 경제권으로 복원하려는 의미를 가진.
- 중국의 신동북진흥전략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포함되는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구축을 매개로, 동북3성의 경제적 정체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신규 산업기지 조성, 기술 혁신 및 R&D기지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평화협정이 현실화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은 결정적 모멘텀을 갖게 될 것임.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낙후된 연해주 등의 지역 개발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정책으로, 15개 선도개발구역의 천연자원 개발, 산업 육성과 블라디보스톡 등 5개 자유항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음.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개방되면 신동방 정책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편익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시장 확대의 계기로 만들어야

- 각각 올해 4월과 5월 중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즉각적으로 한반도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음.
 - 1994년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체결하고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폐기된 제네바합의의 경험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여건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고를 잇는 경제회랑 중심의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공동체 구성은 각 나라가 보이는 관심으로 볼 때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조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 이행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지리적으로는 중동, 그리고 공중으로는 석유 플랜트에 편중된 해외건설의 약점을 극복하고 중국, 몽고, 러시아 지역과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평화협정이 가져올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실제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해야 할 것임.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공제 조직의 자본 안정성 제고 방안⁵⁾

- 영리기업에 비해 자본조달 창구 및 방법 제한적, 이용고배당 활용 필요 -

■ 국내 공제조직 81개사 가운데 건설공제조합 등 일부에서만 정기배당 실시

- 2017년 상반기,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공제 조직의 수는 약 81개⁶⁾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지난 2002년 총리실에서는 국내 공제 조직의 수를 32개로 발표하였으며, 2011년 보험연구원에서는 60개로 파악함.
 - 국내 공제 조직은 그동안 협동조합, 공제조합, 공제회, 협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조합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설립의 기본 취지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
 -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제 조직이 조합원에 대한 이익 환원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건설·교통 관련 공제 조직 14개를⁷⁾ 조사한 결과 매년 조합원에게 정기배당을 실시하는 조직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단 2곳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 관련 공제 조직 6개, 교통 관련 공제 조직 5개, 그리고 공제회 3곳 등 총 14개 조직의 배당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만이 매년 정례적으로 조합원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짐.

■ 배당 부진의 주요 원인은 적절한 출자금의 미확보

- 공제 조직의 배당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는 운용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적정 출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공제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시장 경쟁력이 미진한 것 등을 들 수 있음.
 - 지나치게 낮은 서비스 수수료의 책정으로 잉여금 발생 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 그리고 출자금의 확대를 위한 잉여금의 적립 또한 배당 부진의 원인으로 파악됨.

5) 본고는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임기수(2018), 「배당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임.

6) 임기수(2018), 「배당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 p.92 참조.

7) 건설 관련 공제 조직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 교통 관련 공제 조직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정된 재원조달 창구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 확충의 난제로 작용
 - 이용자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은 투자자가 운영하는 영리 조직과는 달리 자금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이용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임.
 - 더불어, 주식회사의 투자자보다 추가 출자에 대한 선호도가 작은 공제조직 조합원의 경향 또한 공제조직 출자금 확충의 어려움 중 하나임.

■ 경쟁력 및 자본 안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용고배당 활용 필요

-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거대 영리기업과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변화이므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래에 다가올 거대 영리 조직과의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공제 조직 또한 영리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 및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공제 조직은 영리기업에 비해 자본조달의 창구 및 방법이 제한적인 만큼 자본 안정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용고배당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출자배당은 배당의 간편함과 편리함으로 인해 다수의 공제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조합 이용이 없거나 적은 조합원에게도 출자좌수에 따라 잉여금이 비례 배당되므로 조합과 조합원의 동반 성장이라는 공제 조직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대체 방안으로 조합원 및 공제 조직의 동반 성장에 효과적인 이용고배당의 활용을 생각할 수 있음. 이용고배당은 조합원의 사업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사업 순이익(Net Income)을 사업의 이용량이나 이용 금액의 비율로 배분해주는 배당 방식을 말함.
- 이용고배당은 총괄 수익배당, 상품별 수익배당, 혼합형 수익배당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
 - 총괄 수익배당 : 공제 조직의 수익 원천에 대한 사업별 또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활용 가능하며, 당년도에 공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전체 수익에 대해 조합원의 이용도와 조합원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배당액 산출
 - 상품별 수익배당 : 사업수익을 조직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상품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상품에 대한 운용 수익을 조합원별로 계상하고, 기여액 비율을 비사업수익에 적용한 후 사업수익과 비사업수익을 합해 배당액을 계상하는 방식
 - 혼합형 수익배당 :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상품 수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전체 운영 수익과의 균형을 맞추어 배당액을 계상하는 방법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4차 산업혁명과 건설 생산성 혁명

생산성 혁명을 촉발시킨 것은 기술이다. 증기 기관, 전기,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다. 4차 산업혁명도 인공지능, 클라우드, 로봇, 3D 프린팅, BIM 등 수많은 ‘스마트 디지털 기술’이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수단이다. 궁극적인 성과는 생산성 혁명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건설 2025’나 인프라청(IPA)의 ‘정부 건설전략 2016-20’을 보라. ‘건설 2025’는 사업비를 33% 줄이고, 사업 기간은 50%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건설전략 2016-20’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발주자인 정부가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BIM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증대 및 협력적인 정부조달 기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건축·건설청(BCA)도 2010년에 이어 2015년에 ‘2차 건설 생산성 향상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매년 2~3%씩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 시공을 대신해 공장 제작 및 조립 방식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선진국에서는 제품 기획이나 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가치사슬의 앞과 뒤는 부가가치가 높으니 자신들이 담당하고, 가운데 위치한 제조는 신흥국에서 하는 게 낫다는 이론을 맹신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면 제조도 선진국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조 현장이 없다면 제조업의 혁신도 어렵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건설산업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어떤 건설 선진국도 ‘시공’을 무시하지 않는다.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거나, 설계와 시공을 묶어서 발주하거나, 시공업체가 설계 단

계에 개입하여 관련 사업자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발주방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처럼 시공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설계나 유지관리로는 생산성 혁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전히 우리 건설산업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발주제도는 ‘연결과 통합’이 아니라 업종별 분리발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도급 규제를 비롯한 건설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 건설사업 참여자간의 관계도 적대적이다.

작년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에는 ‘건설 노동생산성 40% 향상’이란 목표가 있다. 우리의 건설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13.6달러 수준인데 19달러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어도 우리 건설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의 반도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건설 선진국의 생산성이 더 향상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도 목표로는 결코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올 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품’도 중요하고, BIM 같은 ‘기술’도 중요하다. 인프라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처럼,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건설 생산성 혁명을 추진했으면 한다.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도 생산성 혁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건설경제, 2018. 3. 5〉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